

대학에서의 통일 교육의 과제와 방향

고 대 만*

목 차

- I. 서 론
- II. 통일의 공공재적 성격
- III. 통일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
- IV.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설정과 내용 체계의 재구성
- V. 결 론

I. 서 론

독일 통일이 상징하는 탈냉전적 신국제질서의 태동이라는 외적 요인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표 등의 일련의 남북 관계의 진전 등으로 상징되는 내적 요인은 통일에 관한 일반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온 독일의 통일은 분단된 채 언제 그런 날이 돌아올지 모르는 한국인들에게는 부러움과 동시에 초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각계 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즉 통일을 위한, 또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에

* 제주교대 교수

대한 논의가 과거의 통일 교육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소리와 아울러 최근에 매우 활발해져 가고 있다. 즉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심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국민 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대학에서의 통일 교육이 과연 필요하며 또한 가능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 체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런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상되었다.

II. 통일의 공공재적 성격¹⁾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만일 통일이 성취되는 경우 어느 특정인이 배제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며, 통일된 한반도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의 양이 결코 다른 사람의 행복의 양을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은 공공재(public goods)가 요구하는 두가지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므로 공공재의 일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공공재의 특성의 하나로 그 성취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공재 확보를 위해 나의 귀중한 금전과 노력을 제공한다고 해서 공공재가 반드시 산출된다는 하등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공재 산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재는 일단 산출되면 그 혜택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것이어서 무임 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나의

1) 김종립,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 공동체 형성 이론," 국토 통일원 편, 한민족 공동체 방안 논집 1, 국토 통일원, 1989. pp. 48-58. ; 임혁백,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분석," 이용필 편, 남북한 통합론, 인간 사랑, 1992. pp. 45-48. ; 임혁백, "남북한 통합과정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 한국 정치 경제학회 발표 논문, 1992. 5.

노력과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공재의 자발적 산출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공공재 산출을 위해 개인들은 기여를 회피하려 한다. 그래서 결국 공공재를 산출함에 있어서 디렘마에 빠지는 것이다. 즉 공공재는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데도, 실제로 성취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도 공공재의 일종이라고 할 때 그 달성에 있어서 디렘마에 빠지게 된다. 즉 통일은 모두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다.

Ⅲ. 통일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

통일은 바로 이런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의 달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디렘마에 빠지게 된다. 이 디렘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비용 혹은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통일을 달성해 나가는 가이다. 결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해가 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 것 같다.

통일은 누가 이루는가. 앞장 서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통일 의지만큼 정치가들은 움직인다. 통일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통일정책의 수준도 국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민의 수준이 낮으면 정치 지도자는 통일 문제를 구실로 국민을 억압하고 조종한다.” 바로 여기에 국민의 의식 수준의 고양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이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정치·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의 통합이지만,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통일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신생국들의 내부 분열과 대립은 외세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으

2) 김신일, “민족 통일에 대비하는 사회 교육,”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 교육연구 제16권, 1991, p. 54.

3) Ibid., p. 48.

나, 독일의 경우처럼 점령군들이 분단하여 각각의 정부를 세워 놓고 통합을 공식적으로 가로 막는 상황이 아니면, 내부 분열과 대열은 궁극적으로 양 집단의 민족 통합 의식이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

만약 서독과 동독이 각기 자라나는 세대와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가르치고,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요, 반민족적 집단으로 가르쳤다면 독일의 통일은 이루어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외부의 힘에 의하여 혹시 통합하였다 해도 분열과 반목으로 참다운 통일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신의 통합 없이는 물질적 통합은 실현시키기도 어려우며, 인위적으로 물리적 통합을 성취하였다 해도 정신적 원심력의 작용 때문에 참다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재분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 국가가 분열하는 사례를 역사는 얼마든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육이 뒷전에 머물러 있는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다. 교육을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IV.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설정과 내용체계의 재구성

목표 설정과 내용 체계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편의상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통일을 한민족 공동체의 삶의 과정으로 보고, 통일이 되기 까지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과정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된 교육을 통일 달성 교육, 후자와 관련된 교육을 통일 대비 교육이라 부르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은 목표 설정과 내용 체계에 대하여 논의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 통일 달성 교육에 있어서 목표 설정과 내용 체계

1) 목표 설정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통일국가 실현 의지를 가진 국민

4) Ibid., p. 49.

이 된다.

2) 내용 체계의 재구성

위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즉 분단의 요인, 남북한 체제의 특징, 국제환경의 변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 통일실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 남북한 통일 정책 혹은 방안을 포함한 각종 통일논의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지도상의 주안점을 염두에 두고 위의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분단의 요인

조국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분단은 국제적 요인과 우리 민족 내부의 자주 독립 역량 및 통일 역량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⁵⁾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6.25전쟁에 대한 최신의 공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책임 귀속을 명백히 따지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2) 남북한 체제의 특징

남한은 자유민주적 정치 체제,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를 질서의 기본 원리론 삼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남한 사회의 취약점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극복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체제는 한마디로 정치와 경제의 영역이 융합된 국가 사회주의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김일성 유일 사상인 주체 사상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국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이론적 모순점과 실제적 모순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체사상화된 북한 사회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5) 양성철 편, 남북 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경남대 출판부, 1989; 고려대 평화 연구소 편, 남북 분단의 극복과 평화, 법문사, 1990 등 참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3) 국제 환경의 변화

최근에 와 동서간의 냉전 체제의 해체로 한반도 문제의 '민족 내부 문제화' 경향이 촉진되고 있으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은 아직도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제 정세의 변화 추이와 주변 각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향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주적 역량의 강조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아니듯이, 아무리 주변 환경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량이 그를 이용할 만큼 성숙되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도 놓치고 말기 때문이다.

(4)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

통일은 당위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사적 요청이라는 차원,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 인도주의적 요청에 부응한다는 차원, 불필요한 민족 역량의 낭비의 방지라는 차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5) 통일 실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

독일 통일을 바라보면서 그 통일의 원동력이 된 요소들을 추출하여 그것을 통일실현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에 관한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박성조 교수는 기능주의적,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서독 내에서의 독일 통일의 촉진 요소를 추출해내고 있다.⁶⁾

6) 박성조,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통일 연수원, 1992. pp. 9-15.

ㄱ. 서독은 독일의 정치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능률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서독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인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은 물론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인 여당과 야당 간의 시한부 정권 교체룰 안정 속에서 실행해 왔다.

ㄴ. 서독의 산업 민주주의는 그간 서구 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발전하고 성숙해 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은 점령국의 덕택으로(사실은 압력에 의하여) 서구에서 가장 진보적인 공동 결정 제도를 철강·석탄 산업에 도입해서 설명했으며, 이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좌경화될 수 있는 노조와 노동자를 포용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이와 보조를 맞추어 서독은 모범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했다. 물론 사회 보장 제도는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없이 사회보장 제도도 없다는 인식 위에서, 우선 '성장', 다음은 '사회보장제'라는 순서로 추진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에로의 경향성을 견제할 수 있었다.

ㄷ. 서독은 1950년대 초부터 무제한 방치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갖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여, 만약 공정 경쟁 행위에 위배되어 경쟁 질서가 부조화 상태로 갔을 때에는 국가가 간섭하여 다시 원활한 공정 거래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 경제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촉진 정책을 추구하고, 광범하고 분산된 중산층 육성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독일 경제는 건전한 구조에서의 성장과 사회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 안정의 기초를 닦았다. 이와 같은 요소는 결과적으로 서독의 경제 생산성을 고도화시켰으며 서독을 명실공히 세계 제1의 무역국으로 부상시켰다.

ㄹ. 독일 통일에 관해 국민 전부, 모든 사회 단체 간에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

동서독 간의 접근은 정부, 정당, 사회 어느 기관에게도 정치적 도구로써 이용되거나 악용되지 않았다. 즉 통일 정책은 정부의 전유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모든 사회 조직, 기관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동독이라는 상대방을 찾아 접근하는데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해 주었다.

이와 같이 동서독간의 국민과 국민, 단체와 단체 간의 접촉 이외에도 동독인이 서독 방송과 텔레비전은 통해 서독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동독인이 보는 서독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 물질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압축되었다. 이것이 동독인으로 하여금 서독으로 피난 내지 이주하게 만든 가장 큰 동기였다.

ㄱ. 서독 외교의 성공을 들 수 있다.

서독은 2차 대전 후 아데나워 수상에 의하여 서구 국가(프랑스, 영국 및 주변국들)들과 철저한 우호 관계를 구축했다. 서독은 서구 민주주의에 뿌리를 박고 겸손하고 신뢰있는 파트너로써, 정치적·군사적 야망이 없는 국가로서 행동했다. 이것이 서독이 전후 시행한 아데나워의 서방 통합 정책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통일 실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서방 정책에 의한 서독과 서구 국가의 우호관계는 브란트에 의해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동방 정책의 뒷받침이 됐다. 그러나 동방 정책은 직접적인 통일 정책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동구·동독과 접근하여 냉전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6) 남북한 통일 정책 혹은 방안을 포함한 각종 통일 논의

각계 각층의 통일논의 및 여러 접근법들에 대한 분석 비판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우선 어떤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인가 하는 통일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것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남북한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우리는 민족 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주역이 되어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남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룩하려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폭력이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압제 하에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무산 계급'이 독재하는 공산화 통일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통일 논의에는 어떤 내용과 방법의 통일이 민족의 현실과 장래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가치 기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통일의 목표 즉 어떤 통일 국가를 건설해 나가려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거나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통일된 국가는 민족 성원 모두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도 남과 북은 입장을 크게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가 그리고 있는 통일의 미래상 역시 다르다.”

서로 다른 관점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어떤 하나의 것으로 통합될 경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의 비교 검토를 통해 서로 차이 나는 점을 조정할 수 있는 논의를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합의하여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1. 통일 대비 교육에 있어서 목표 설정과 내용 체계

1) 목표설정

통일 후 한민족 공동체의 성원은 통일 국가의 민주 시민으로서 그 국가의 유지·발전에 기여한다.

2) 내용 체계의 재구성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일 이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 민주 시민적 자질의 함양, 세계적 안목의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선정 조직 되어 교육되어야 한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일 이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현재 독일 통일 이후에 전개되어 가는 부정적 현상을 다룸으로써 후발자로서의 우리는

7) 통일원, 화해 협력 시대의 통일 교육 기본 방향, 1992. pp.11-13.

그런 상황에 대해 예견하고 그것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정적 현상에 대한 정보들은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 박성조 교수는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 및 민족 의식적 차원, 교육 및 연구적 차원의 5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ㄱ. 정치적 차원

현재 독일 정치에서 가장 큰 진통은 동독에서의 과거 청산이다. 즉 서독에서 2차대전 후 나치에 동조한 사람에 대한 과거 청산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시행 착오를 동독에서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법치 국가의 근본 원칙에 따라 증거없는 형벌을 생각할 수 없으나, 많은 서류와 증거물이 통일 직전에 없어져 증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거 청산에 대한 3가지 입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킨켈 법무 장관의 입장이다. 독일이 법치 국가인 이상 반드시 합법적 절차에 의한 과거 청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증거 서류 취득이 계속 어려울 경우 ‘대사면’도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스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수상의 입장이다. 그는 정치중립적인 종교인·문화인·학자들로 구성된 「과거 청산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셋째, 쇼올래머 목사의 입장이다. 그는 「총국민 정신 재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인민 재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간 진전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킨켈 법무장관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이미 유효한 상황이다.”

위의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사람에게 구동독의 민주주의 구축 작업과 산적한 행정 결정 업무를 맡기겠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다. 즉 동독이 서독과 같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려면 우선 이를 운영하고 국민 의식 속에 민주주의를 심어 갈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8) Ibid., pp.17-84.

9) Ibid., p.20.

경제 부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이 방면에 대해서는 동독인들은 거의 무경험·무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경제 부서는 반드시 서독 출신이 각료직을 맡고 차관급에 동독인을 쓰고 있다.

ㄴ. 경제적 차원

동독 경제가 1990년 7월 1일 통화 통합·경제 통합이 실시됐을 때, 서독 기업과 경쟁할 수 없었다. 동독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서독 생산성의 50% 이하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25% 이하에 불과하다. 동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노후화된 기술·생산시설·장비, 경영 능력 부진, 자원 배분 방법의 비합리성, 조달 체제의 비효율성, 열악한 사회간접 자본, 저조한 노동의욕, 숙련공 부족, 생산과 연결되는 연구·개발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어느 한가지 요인만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고 상기의 제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원인들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 동독 기업은 재건이 불가능하며 단지 소수의 생산업체만이 재생가능한 실정이다.

동독 상품을 선호하는 동독인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동독산 농산물가지도 동독인들은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동독산 제품을 조달해 왔던 동구 공산권의 판매망도 완전히 마비상태로 들어감에 따라 많은 취업자도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동독에서는 약 백만명의 완전 실업자와 약 1백 30만명의 시간 단축, 노동자를 포함해, 약 2백 3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편 약 8천여개의 동독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회사는 그동안 매각을 통해 약 3천여 기업이 민영화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매각되고 있는 기업체는 비교적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이 높고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며, 공해가 적고 사회간접 자본도 다소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다. 신탁회사가 앞으로 국영 기업을 전부 민영화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독 경제재건에서 또 다른 큰 문제는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 없다는 것이다. 콤비나트의 경영진은 대부분 공산당원, 국가안전부원, 혹은 소수의 엔지

니어였다. 이러한 경영인들은 상명하달식의 명령만을 준수하는 의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경영인은 경영인으로서 가져야 할 경영 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창의성, 모험성,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금까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재산권 처리'이다. '배상 원칙' 혹은 '보상 원칙'을 택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상치하고 있으며, 신탁회사가 관할하는 국영기업 재산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분단 이전 개인 소유의 주택, 토지 등의 재산권 처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장기간의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ㄷ. 사회적 차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자주 쓰여진 용어가 있다. '정치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라는 두 용어이다. 콜 수상이 정치적,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일단 통일을 성취하는 '정치적 통일'을 추구한데 대해 콜 수상에 대한 도전자로서 등장한 시민당의 라폰텐은 '정치적 통일'은 물론이지만 '사회적 통일'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나섰다. 사회적 통일이라는 용어의 내용은 동서독인간에 소득·임금 차에 의한 1·2등 국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독일 통일 이후 남아 있는 과제는 '사회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적 통일 구상의 시발점은 동독인이 서독 물질 문명을 선망하여 너나없이 동독을 버리고 서독으로 이주한다면 동독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독일의 동서간에 균등한 경제 생활 수준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독의 임금 수준이 서독 수준의 60%인데, 이 격차를 없앨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점차적으로 서독과 평준화하려는 (1995년까지는 동서독간에 임금 격차는 없어진다) 때문에 동독에 투자하려는 서구 기업인들이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구동독의 특권층은 통일 이후 일부 해고되어 실업자가 됐지만 대부분 다시 현 동독 지역에서 특권층으로 재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분야는 구동독 지역의

기업체 경영인과 행정 관청의 관리들이다. 이처럼 구동독 시절의 특권층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특권층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구동독 기업을 민영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ㄴ. 문화 및 민족 의식적 차원

현재 통일 독일이 겪고 있는 진통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서독인의 의식적, 심리적, 행동적 갭이다. 서독인은 동독인을 '노동하지 않고 생을 즐기려는 사람', 동독인은 서독인을 '동독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ㄷ. 교육 및 연구적 차원

동독 지역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교육 제도와 교육 시설, 인력 등의 신설과 확충이다. 교육 제도 개혁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구동독의 교육 제도를 서독 제도로 개편하는 작업이다. 학교 시설과 교과 내용의 개편은 서독의 예를 고려해서 비교적 쉽게 추진 할 수 있으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교과서 내용에 맞는 교사·교수의 채용이다.

중·고등 학교와 국민학교의 개편은 대학 교육의 쇄신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다. 중요한 이유를 들자면,

· 교사들의 대부분이 열렬한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대책이 없다. (물론 과격하게 「드레스덴주」와 같이 1만명의 교사들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 학교 시설을 전반적으로 쇄신해야 하나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 교과 내용도 전반적으로 쇄신하여 서독의 교과 내용으로 개편해야 하나 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매우 희소하다는 것이다.

(2)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

위에서 보았듯이 통일은 환희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 아니라 좌절과 충격도 함께 수반된다. 이 좌절과 충격은 반드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킨다. 사회적 갈등과 반목은 재분열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 좌절과 충격을 딛고 일어서야만 통일 국가는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 의식이다. 이 민족 공동체 의식은 사회 문화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통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통일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된 것이다.

(3) 민주 시민적 자질의 함양

민주 시민적 자질의 함양은 현재도 국민학교에서부터 줄곧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통일된 이후의 상황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국민 윤리 과목 등에서 행해지는 교육 내용의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

(4) 세계적 안목의 확대

오늘날의 세계는 하루가 달리 변하고 있으므로 세계적 변화에 둔감한 국가는 곧 뒤처지게 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통일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내용의 조직이 필요하다.

V. 결 론

한민족 성원 전체의 복된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요청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달성은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통일은 단지 구호나 맹목적인 감정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노력한다해도 통일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이나 역량의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급작스러운 통일은 달성되기도 어렵고 달성된다 해도 혼란만 가중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달성 노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다각도의 꾸준한 통일 달성노력이 요청된다.

통일 달성을 위한 노력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교육 부문을 들 수 있다. 통일

교육은 교육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은 전적으로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은 일정 시점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및 일반사회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양질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은 통일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에 있어서도 통합의 구심점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대학에서 통일 교육거울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잠정적으로 재구성한 통일 교육의 내용 체계를 교육함으로써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북한 통일론」 「남북한 비교론」 등의 강좌를 직접 설정해서 강의할 수도 있고, 그냥 현행의 강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라면 그러한 내용을 다루어왔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왔던 「교양 국민윤리」 내지는 이와 관련된 과목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게 통일 교육을 접근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각 대학에서 통일 관련 연구소를 운영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학문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통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광식, "통일 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의 의의," 통일 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교육 정책 자문 회의,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1990. 9.
- 국토 통일원 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 방향, 1990. 2.
- 국토 통일원, 통일 이념과 민족 공동체 형성, 국통조 90-12-105, 1990.
- 김정환, 민족과 교육, 박영사, 1976.
- 문용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전략", 한국 교육 학회, 교육학 연구, 28권 3호, 1990.
- 박성조,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통일연수원, 1992.
- 박용헌, 문용린,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교육 정책 자문회의,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1990. 9.
-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지식산업사, 1988.
- 양성철, 남북 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서울 : 극동 문제 연구소, 199.
- 이상우 편, 통일 한국의 모색, 박영사, 1988.
- 이용필 외, 남북한 통합론, 인간사랑, 1992.
- 임현모, "통일 정책의 변천에 따른 교육 과정의 효율화, - 국민 윤리와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도덕 국민윤리과 교육학회, 도덕 국민윤리과 교육, 1호, 1990.
- 정세구, 국민 정신교육의 과제, 교육과학사, 1985.
- 정세구, 청소년 이념교육, 배영사, 1987.
- 정용길, 분단국 통일론, 고려원, 1988.
- 최만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치 심리학적 접근," 한국 정치학회, 한국 정치학회보, 제25집, 제1호, 1990.

- 통일원 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1991.
- 통일원, 통일 교육 기본 방향, 1992.
- 한국 사회 교육 협회, 사회 교육 연구, 1991.
-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편, 국민윤리학, 박영사, 1985.
-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편, 국민 사상 정립에 있어서의 과학성과 이념성, 1986.
-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편, 통일 이념 정립을 위한 연구, 1985.
-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편, 통일을 위한 민족 화합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1984.
- 한국 정치 경제학회, 전환기의 남북한 관계, 1992.